

7월 국회도 문만 열고 끝?

추경-안보 점점 찾지 난항 여야 접촉 일정 합의 못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반쪽' 소집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도 전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 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고 외형상으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추경 처리 로드맵을 못 박지 않는 이상 의사일정 협상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휴일인 28일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접촉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 전 한국당이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합의해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추경에 포함하기로 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내역을 정부가 다시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선을 그어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단 이달까지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여론 압박도 병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7월 말일이라도 반드시 통과되어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열면 추경 처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안보와 추경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인트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및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

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해 정부-여당에 따져 물었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러-일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결의안과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폐 촉구 결의안' 등도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임시국회 소집에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추경 처리 날짜를 정확히 못 박지 않아도 본회의 일정지 잡으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며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대응적으로 양보한 야당 앞에서 여당의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일본은 경제침략 중단하라”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관계자들이 '민족자주대행진 선포 100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 및 경제보복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연합뉴스

정동채 前장관, DMZ평화페스티벌 북한 참가 건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 위한 국제대회 참석... 11개국 300여명 참석 공동발표문

정동채(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정) DMZ평화페스티벌 북한 참가를 건의하고, 평화 의지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와 북측대표단을 비롯한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고,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300여명이 참석해 지난 26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와 (사)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을 모으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김원



리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일행도 자리를 함께 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본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선 식민지 지배의 향수를 자극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실현하고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한 속심의 발로"

라고 비난했다.

이번 행사에서 남과 북을 포함한 11개국 참가자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채 전 장관은 2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이 국제대회에 참석해 리종혁 부위원장과 인연을 맺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리 부위원장에 DMZ평화페스티벌 북한 참가를 건의했다"면서 "DMZ 평화페스티벌은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출신으로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정 전 장관은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41대 문화관광부 장관, 광주비엔날레 대표 이사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

평화당 당권파-비당권파 갈등 악화로... 징계 놓고 충돌 예고

민주평화당 당권파가 비(非)당권파를 향한 징계의 칼을 빼 들면서 '분당(分黨) 시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평화당에 따르면 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오는 31일 비당권파인 양미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일부 당원들은 '양미강 최고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

대표가 신당 창당 논의로 해당 행위를 한다'며 2명의 비당권파 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낸 상태다. 평화당은 양미강 최고위원에 이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위도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며, 최경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 내외에서는 최근 정 대표

가 이미 징계를 경고한 바 있는만큼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신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는 별도 세력화와 세몰이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안정치는 29일 당 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하고, 30일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제3지대 세력 규합 방안을 강구한다. /임동욱 기자 tuim@

문 대통령 사정라인 재정비 개혁작업 고삐... 개각·靑인선 속도

시민사회 수석 김겨성 일자리 수석에 황덕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겨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면서 집권 3년차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데 이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이 예상대로 내달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사정라인이 모두 새 얼굴로 채워진다.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으로 집권 중반기 개혁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나 검정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에 새 사정

라인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신임 민정수석이 '감사통'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집중하고, 조 전 수석과 윤 총장은 검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사정라인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 결정에는 내년 총선 일정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의 경우 총선에서 관악 읍에, 이용선 전 수석은 서울 양천을에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에는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장관들 중에서는 박상기 법무-박능후 복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이재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법무장관 후보로는 조 전 수석이 유력하며 복지장관 후보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태우 서울대 명예교수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예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는 일단 유임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최근 이효성 방위위원장 공개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표명수 시사인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 여름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유승호 춘추관장은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은 물론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참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

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3차 소환도 불응... 경찰 강제조사 주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3번째 소환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이들을 강제조사하는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염용수-염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의원 측에서는 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앞

서 해당 의원들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기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수'를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서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 경찰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최소 연말까지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임동욱 기자 tuim@

제9회 아로마라이프 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9년 9월 1일 ~ 11일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 참가신청
(1) 참가 신청 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7월 31일(수)
(2) 구비서류 :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3)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될 수 있음

■ 참가팀수
무등·광일 토너먼트 각16개팀(총 32개팀)

■ 시 상
(1)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2) 최우수감독상
(3) 최우수선수상
(4) 우수선수상
(5) 최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주최 | 광주일보 · 전남문화

주관 | GBSA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GWANGJU BASEBALL & SOFTBALL ASSOCIATION